

“분노·허탈”... 중소기업 소상공인 ‘최저임금 저항’ 위험수위

최저임금 또 두자릿수 인상

일부 단체 ‘수용불가’ 입장 밝혀 “편의점 점주, 범법자 몰아” 후평 업종별 구분 등 대책마련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이어 두 자릿수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사용자 단체들이 가뜰이나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더욱 힘들게 됐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분노, 허탈감, 심각한 우려, 아쉬움 등의 단어를 쓸 정도다. 일부 단체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논평에서 “경쟁계가 강력히 주장한



지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이 전원의회의 참석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결국 최저임금위 전원의회의에 불참했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들이 빠진 채 최종 결정됐다. /연합뉴스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차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

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박탈감이 큰 곳은 소상공인들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시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합회는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과연 1년 만에 29% 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모임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해왔던 근접 출점, 높은 상가임대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을 정부와 가맹사업본부가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한계에 다다른 편의점은 이번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7만 편의점 점주들을 범법자로 몰아 ‘잡아가겠다’는 결정이자 공개적 발표”라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혹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金기자의 一問一答 ① 최 승 재 소상공인聯 회장이 말하는 ‘최저임금’

“사용자의 지불능력 감안않고 일방적 결정 정부, 소상공인 버렸다... 대통령이 해법을”

“지불능력을 향상시킨 후 최저임금을 올려도 올려야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했지만 우리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조조정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소상공인을 ‘퇴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소상공인을 끝까지 데리고 갈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金기자의 一問一答’ 첫 회 주인공이 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사진)이 울분을 터뜨렸다.

마침 최저임금위원회는 19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지난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팽팽한 줄다리기에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용자위원들은 ‘보이콧’을 선언하며 결국 이날 전원의회의에 불참했다. 이때문에 총 27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의 근로자위원과 9명의 공익위원 등 14명만 참석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통과됐다.

최승재 회장은 이에 대해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최저임금 이슈를 놓고 최 회장을 긴급 인터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평가를 해 달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위원회)의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했던 우리 주장은 강그리 무시됐다.”

“임금을 주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높여준 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했지만 일방통행을 했다. 퇴로를 만들어주지 않고 또 다시 최저임금을 두자릿수 올린 것에 무척 화가난다. (결정 과정에서)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한 푼도 올려주지 말자는 이야기였다.

“그렇지 않다. 상승률도 중요한 게 아니다.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

메 트로신문이 새로운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합니다. 한 가지 이슈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통해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목소리에는 특정 내용에 대한 진단과 평가, 대안까지 심층적으로 담겠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한 기자의 여러 질문에 인터뷰이(interviewee)로 나선 기업인, 협단체장, 학계 관계자, 기관장 등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답변한다고 해서 제목을 기존 한자인 ‘一問一答’과는 다른 ‘一問一答’으로 했습니다. (편집자 주)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 사용자위원 불참... 최저임금 통과

“정당성 결여된 결정 ‘수용불가’ 공정경제로 소상공인 퇴로 만들어야”

임금을 경험해보니 소상공인들은 갈 곳이 없어졌다. 소상공인들의 노동시간은 자신들이 고용해 임금을 주는 근로자보다도 더 길다. 그렇지만 사장이 힘들더라도 전년보다 (종업원)임금을 더 올려줘야 한다는 것엔 모두 동의한다.”

“사장이 좋지 않다고 임금을 깎겠다는 발상도 현장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더 배려해주려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 고용한 사람의 사기가 떨어지면 자신의 사업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불능력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장사가 잘 되도록 해야한다는 말이다.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는 것보다 소상공인들의 지출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렇게 되면 일하던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 폐업률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소득자의 지불능력만 높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고소득자들이 쓰는 돈은 소상공인까지 잘 오질 않는다. 백화점에서 소비하지 동네가게, 전통시장에서 돈을 잘 쓰질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카드수수료 인하나 ‘젠트리피케이션’을 야기하는 임대차문제 등 정책도 지지부진하다.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마찬가지다. 과밀화문제도 해

결해야 한다.”

“특히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오르게 됐는데 소상공인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상상이상이다. 소상공인들은 살아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자기돈 들여서, 또 빚내서 장사를 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형으로 소상공인을 하는 사람이 많다.”

“게을러서, 또 능력이 없어 취업을 못한 것이 아니다.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소상공인들은 전체 일자리의 40%를 감당하며 고용에도 앞장서고 있는 당당한 경제 주체다. (정책적)도움을 주기는 커녕 정당성이 결여된 최저임금으로 우리를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퇴로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만이 되고, 불만이 강해지면 저항이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경제계 일부에선 ‘산업별 차등화’를 주장했는데, 연합회는 ‘5인 이하 사업체 차등화’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어떤 내용인가.

“같은 음식점점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곳은 연간 매출이 수 십억원이나 되지만 어느 음식점은 사장이 알바생보다 월급을 더 적게 가져가는 곳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산업별로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면 이런 상황에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하지만 ‘5인 미만’은 다르다. 물론 소득 수준도 함께 고려해 차등화를 해야 한다. 5인 미만은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다.

최저생계비도 받지 말라고 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 사업체 규모별,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세분화와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번 최저임금도 사실상 중립에 서야 할 공익위원들 의견에 따라 결정됐다. 매년 같은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익위원들의 완벽한 중립을 위해 국민공모제를 거치거나 아예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이 이런 험한 길을 가게하는 것 같다. 해답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놔야 하나.

“물론이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이)선한 의도였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근로자들 소득이 올라가고, 소상공인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 원하는 바일 것이다.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해법을 내놔야 한다.”

/김승호 기자

제55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8월 22일~9월 13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8월 25일~9월 1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9월 2일(일), 9월 9일(일), 9월 11일(화)

김대영선생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